

중국지역

▣ 中 중앙정부, 근거 없는 지방정부의 세수우대 정책에 제동

- 금년 들어 중국 각 지방 전역에 걸쳐 전국적인 세수감면정책에 대한 일체 조사가 진행중 이며 금년 6 월 30 일 “감면세 일반조사 실시방안”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각 지방세무국은 감면현황 조사에 대한 협조뿐만 아니라 위법적인 감면정책 정리에 부심중임.
- 장수성(江蘇省) 국세국의 관계자는 금년 8 월 초 중국 각 성급 세무국은 세수징수 및 관리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정부가 규정에 맞지 않는 세수우대정책을 정리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.
- 중국은 1994 년 중앙세와 지방세로 나뉘는 분세제(分稅制)를 실시한 이래 중앙정부는 지속적으로 지방의 감면현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- 국세총국의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전국성 조사를 통하여 일부 지방이 △세수우대 범위확대 △우대비율 상향조정 △우대기간 연장 등의 편법적인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이 발견됨.
- 또한 지방정부의 세수우대 정책으로 인한 세수유실 규모가 4.3 억 위안에 달하고 있으며 세무기관이 처리한 세무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지방정부의 세수규정 만해도 88 건에 이르고 있음.
- 현재 중국의 세제를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省급 정부는 중앙정부의 수권을 받아 일정범위 내에서 감면정책을 실시할 수 있으나 市급 이하의 정부는 감면정책의 시행권한이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는 세금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세수감면 권한은 없음. 그러나 실제로 각 지방정부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이고 초법적인 우대혜택을 남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분별한 세수우대혜택이 중앙재정의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.
- 중국내 주요 경제발달 지역 중 하나인 장수성의 예를 들면 개발구간 투자유치 경쟁의 심화에 따라 세수우대 혜택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 이미 많은 개발구가 기업소득세의 2년 면세, 3년 50%감면의 상한선을 넘어 5년 면세, 5년 50% 감세 등 초법적인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사실도 적발되고 있음.
- 현재 각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면정책은 중앙정부 규정하고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감면정책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감면정책 두 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이번 감면정책 현황조사는 지방정부의 환급을 통한 감면제도를 주요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음.

- 그 동안 중국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세수우대정책에 대한 규정과 감사를 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신종 세수우대정책을 제시하여 왔으며 문제는 지방정부가 자체비용을 들여 실시하는 감면정책으로 장강삼각주 지역에 널리 실시되고 있음.
- 중앙정부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고안한 신종 세수우대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소위 “우선 징수, 즉시 환급”의 방법으로 일종의 간접적인 감면으로 지방정부의 보조금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음.
-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이러한 세수우대 정책실시에 따라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는 경우 재정의 허위증가 등의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- 이러한 관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가 강화됨에 따라 각 지방정부는 또 다른 대책으로 이를 회피해 나가고 있으며. 장수성의 일부 지방은 감면세를 지방세수의 감소항목으로 계산하지 않고 지방세출의 증가항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음.
- 중국의 세제개혁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세제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. 우선 내외자 기업간 기업소득세의 통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세금우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도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.
- 과거 지역위주의 세수우대 정책에서 산업과 기술위주로 전환되는 한편 지역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부지역의 세수혜택이 줄어들어는 한편 서부지역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- 향후 중국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세수혜택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진출전략 수립시 이를 감안하여 진출지역과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초법적인 세수우대정책의 경우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바, 진출시 중앙정부의 규정과 지방정부의 규정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.

(문의처 :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@kotra.or.kr)